



주간통일정세 2011-48(2011.11.21~11.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4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연평도 포격 1년' 맞아 대남비난(11/22, 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연평도 포격 1주년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밝힘.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 서해 일대에서 남조선 군부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있는 지 1년이 되었다"며 "남조선 군부가 온 겨레의 평화 염원에 배치되게(어긋나게) 행동한다"고 비난
- 이 매체는 "남조선 군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 일대에 군 무력과 각종 전쟁장비들을 집중적으로 배비(배치)한다"며 "조선 서해 일대에서 남조선군의 무장도발과 북침전쟁 연습들도 더욱 빈번해지고있다"고 주장
- 이어 "그것은 분명 서해상에서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또 다시 일으키고 그것을 기회로 북침 전면전쟁을 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최근 북남관계의 '유연성'을 거론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힘.

● 北, 한미FTA 강행처리 비난(1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돼 남한의 야당과 각 계층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나라당이 굴욕적인 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끝끝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망동을 감행했다"며 비준안 상정과 처리 과정, 시위 상황을 상세히 전함.
-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파헤쳐본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날치기로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된 것을 계기로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 사회 각계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 北, 백두산 위험 속 '지진·화산 방지법' 제정(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는 지진, 화산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이 법에는 지진·화산의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감시와 예보, 피해 방지와 구조에 관련된 원칙이 제시돼 있으며, 중앙통신은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 등은 언급하지 않음.

● **北, 南연평훈련 맹비난…"결전진입 태세"(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우리 군(軍)이 전날 연평도 포격도발 1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만단의 결전진입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23일 오후 1시부터 조선서해 5개 섬 지역과 그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힘.
- 북한군은 "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
- 또 "지난해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 군대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공화국 영해에 선불질을 해온 도발자들에 대한 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였다"며 "연평도 포격전 1돌을 계기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를 결코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北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전면배격"(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최근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정치적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벌어진 이번 결의 채택놀음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일삼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고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인권의 정치적, 이중기준, 선택성의 극치이며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결의를 언제나와 같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해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함.

- 대변인은 또 "남의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권을 위한 자기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반인륜 범죄국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세상 사람들의 환멸과 조소만을 자아낼 뿐"이라고 주장

● **김광훈 中선양 북한총영사 부임(11/25, 연합뉴스; 동북신문망)**

- 북한의 김광훈 신임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가 최근 부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5일 동북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부임한 김 총영사가 지난 22일 랴오닝(遼寧)성을 방문, 왕민(王珉) 서기를 면담
- 왕 서기와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 김 총영사는 북한 주중대사관의 공사참사관과 외무성 중국국(외무성 제1국) 국장 등을 역임한 중국통으로 꼽히며, 그는 지난해 5월 북한 대표단을 인솔, 선양과 단둥(丹東), 푸신(阜新) 등 랴오닝 일대를 방문,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랴오닝성 정부와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북·중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부자, 서해NLL 관할 4군단 사령부 시찰(11/2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4군단 사령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전함.
- 중앙방송은 "적들이 서해 5개 섬 지역과 그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 반공화국 전쟁연습소동을 벌이는 길에 들어섰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하고 군부대 장병의 가슴마다에는 결사의 의지가 차 넘치고 있었다"고 밝혀 이번 시찰이 전날 연평도 사태 1년을 맞아 우리군이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겨냥해 '청와대 불바다' 등을 언급한 최고사령부 보도의 후속조치임을 시사
-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도 리영호 군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옥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원홍·박재경·현철해 대장 등이 수행
-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이 '리명제가 시업하는 돌가공 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4군단 사령부를 수행한 인사들이 함께했다고 밝힘.

● **김정일 부자, 이틀 연속 군부대 시찰(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북한군 공군 제1016군부대



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군부대에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일단 명령만 내리면 즉시 출격해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 호전광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우고 조국통일의 항로를 열어갈 떨적의 의지와 기상이 차 넘치고 있었다"고 전함.
- 또 중앙통신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한 군부대 비행사'라고 표현해 이번 시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포격 1주년 훈련을 겨냥해 이들 전 '청와대 불바다' 등을 언급한 군 최고사령부 보도의 후속조치임을 시사
-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경옥 당 제1부부장, 김원홍·박재경·현철해 대장 등이 수행했고 리병철 공군사령관이 현장에서 영접

● **北가스관 실무대표단, 러시아 향발(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철운 원유공업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실무그룹 대표단이 26일 러시아를 가려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대표단의 러시아 체류 일정 및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간 가스관 건설사업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일 부자, 황해도 과일군 현지지도(1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등을 대동하고 황해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과일군 내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해방 전까지 밭농사 위주의 낙후한 농업지대였던 과일군이 노동당 시대에 와서 이름 그대로 온 군이 하나의 큰 과수원으로 됐다"고 치하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경옥·한광상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원홍·박재경·현철해 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촬영 (11/22,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11.23 駐北 터키 대사('무스타파 나씨 싸리바스')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23,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1.23 신임 駐北 터키대사와 담화(11/23,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11.23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南) 현지 了解 및 '협의회' 진행(11/24, 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960호'(11.16字),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평양무궤도전차공장 전동기직장 등 17개 단위)과 「26호모범기대영예상」(용문대굴관리소 등 20개 단위) 수여(11/25, 중방)
- 박의춘 외무상, 11.24 離任 駐北 라오스 대사('짜런 와린타라썩')와 담화(11/24, 중통)

나. 경제

- "北정찰총국이 북한지폐로도 외화벌이"(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정찰총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일련번호가 희귀한 북한지폐를 해외에 팔기도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RFA에 따르면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쇼핑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서는 일련번호가 'HH66666'인 500원짜리 북한지폐(1998년 발행)가 6천888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RFA는 한 탈북자의 말을 빌려 북한 정찰총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일련번호가 희귀한 북한 지폐를 골라 해외에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함.
 - 한편 RFA는 21일 현재 '이베이'에서 북한 물품을 검색하면 7천800여개의 물품이 나타난다며 북한 화폐와 우표, 엽서, 훈장, 인민군 군복 등이 다수 올라 있다고 밝힘.
- "고려항공 여전히 불안전" EU 또 운항제한(11/22,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21일 발표한 역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서 북한 고려항공을 또다시 취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로 분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EU 집행위원회 교통 부문의 데일 키드 공보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고려항공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는 계속 EU 회원국에 취항이 금지된다"며 "현재 고려항공에 운항제한을 완화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함.
 - 키드 공보관은 고려항공 관계자들이 운항제한을 완화하려고 EU 집행위원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전함.



- "러시아 극동지역 北근로자 5천명 이상 증가"(11/22, 아사히신문)
 - 러시아의 극동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작년 이후 5천명 이상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무르주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향후 파견 계획을 포함해 5천 명 정도 늘었다고 전함.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작년부터 북한 근로자 약 3천명이 내년 9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건설과 주변 도로 정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북한 무역성과 아무르주는 지난 10월 무역과 경제 협력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아무르주의 수력발전소와 철도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북한이 근로자 500명씩을 보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한국의 시민단체인 '북한인권개선회'의 김희봉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6만~7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보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중국 간 北주민 증발 속출...돈벌이 목적"(1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변경도시를 찾는 북한주민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중국에 머무르거나 아예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국경협약에 따라 변경 도시지역에 한해 여권과 비자없이 '도강증'만으로 상대국을 단기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 도강증을 받아 중국을 찾은 북한주민 일부가 장기간 귀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중국에 간 북한주민이 제때 귀환하지 않는 것은 중국 방문 목적이 주로 돈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주민들은 전함.

- "北 '함남 띄우기'는 함남 불만 무마용"(1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최근 함경남도의 경제성고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함남 지역 주민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한 대북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의 선전과 달리 함남도 내 공장은 대부분 가동을 멈췄다"며 "2·8비날론공장의 경우 비날론 직장만 조금 돌아가고 나머지 직장은 원료와 전기부족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전함.
 - 북한이 이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함남도를 내세우는 것은 3대 세습에 불만이 많은 이 지역 주민을 끌어안으려는 행보라고 RFA는 분석

- 국제적십자 수년 만에 대북식량지원...수재민용(11/24,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수일 내에 수해용 긴급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RFA에 따르면 적십자는 며칠 안에 황해남도 청단, 연안, 봉천군의 6천 가구 2만4천명의 수재민에게 쌀, 옥수수 등 긴급 식량 290t을 지원할 예정
 - 황해남도는 올해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지원 식량은 무주택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적십자는 수재민이 하루에 쌀 또는 옥수수 400g씩 두 달간 먹을 분량을 지원할 계획
 - RFA는 주로 나무심기, 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난 복구 사업을 펼쳐 온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함.
- **中, 北라선 전력공급 송전시설 건설 착수(11/24, 북극성전력신문망)**
 - 중국이 북한과 합의한 라선 경제특구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 시설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고 중국의 북극성전력신문망이 24일 보도
 - 이 매체는 연변(延邊)배전공사가 최근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 설치 노선을 확정했으며 이는 대북 전력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이 매체는 전력난이 북한의 개발과 개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중간 합의에 따라 연변배전공사가 이달 중순 북한에서 전력망 건설을 위한 측량에 나섰다고 소개
 -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달 말 다시 북한을 방문, 북한의 전력 공급 계획과 북한 내 중국 입주 기업들의 전력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한 후 내달 전력망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고 전함.
- **北, 김일성 '쌀밥' 유훈 내년 실현?(1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일성의 생일 100돌을 몇달 앞두고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배급표(카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평양 주민은 "(당국이) 주민 교양시간에 내년부터 식량배급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며 "구역별로 식량배급소와 인민반장들이 매 가구의 인원을 조사하느라 부산을 떠다"고 말함.
 - RFA는 중국에서 만난 신의주, 의주, 흥남, 청진 등의 주민들도 식량배급표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내년엔 완전 배급제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함.
 - RFA는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의 말을 빌려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 100만만 지원받으면 상당기간 전 주민에 대한 배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대규모 식량 원조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
- **"북한 올해 곡물 수확 8.5% 증가"(11/25, AP통신)**
 -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올해 8.5% 증가했지만 어린이들 사이에 영양실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로마에 소재한 유엔 산하 기구의 보고



- 서를 인용해 25일 보도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8.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최근 북한에서 식량 상황을 직접 조사한 이들 기구는 "어린이들 사이에 영양실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함.
 - 보고서는 30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내년도에도 외부의 식량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유한 국가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굶주리는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

■ 기타 (대내 경제)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관련 "차수가 늘어날수록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범위와 전람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평균 50여건의 무역계약과 투자합의(수천만\$규모)가 맺어진다"고 선전하며 "전람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전시장 건설을 설계중"이라고 소개(11/22, 조선신보)
- 경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22, 중통)

다. 군사

● 北경비정, 해상탈북 저지 연안순찰 대폭 강화(11/27, 연합뉴스)

- 북한 해군 경비정들이 주민들의 해상 탈북을 저지하기 위해 연안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 경비정들이 등산곶과 해주, 강령군 지역의 연안에서 해상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해상 탈북 행위를 저지하고 탈북 시도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을 검문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특히 북한 경비정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까지 다가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실태를 감시하던 일상적인 임무까지 접은 채 연안순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그는 "경비정들이 NLL 근처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은 남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보다는 연안순찰 강화 등 주민 단속으로 임무가 치우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관측된다"고 설명
- 또 황해도를 관할하는 북한군 4군단 예하 육상의 해안경비대와 부대에 서도 해상 탈북 단속 임무를 늘린 것으로 전해짐.
-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 주민 21명이 선박을 타고 지난달 30일 서해 NLL을 넘어 탈북한 사건 이후 북측 해안경비대와 육상부대들에 경계강화



명령이 하달됐으며 부대 간 통신량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개성시, 박지원·황진이 무덤 복원(11/21, 조선중앙TV)**
 - 북한 개성시가 18세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1737~1805)과 조선 중기의 명기(名妓) 황진이(생몰연대 미상) 무덤을 복원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
 - 중앙TV는 개성시가 발굴해 복원한 역사유적 및 명인들의 묘 중에 '열하일기'의 작가 박지원과 '송도삼절(松都三絶)' 중 한 명이었던 황진이도 포함돼 있다는 소식을 약 3분 분량의 영상과 함께 전함.
- **北, 알사바 OCA 회장에 친선훈장 수여(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1일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에게 쿠웨이트와의 친선과 체육 교류를 강화한 공로로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
 -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손광호 체육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알사바 회장은 이날 김영남 위원장과 만나 "체육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조선과 쿠웨이트 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함.
- **'만월대 사업' 1년 반 만에 사실상 재개(11/22, 연합뉴스)**
 - 지난해 5·24 대북제재 조치로 발굴작업이 중단됐던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를 긴급보호하는 작업이 이달 2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현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방북해 만월대 유적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보호작업)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또한 "유적지 진단 및 보호조치, 복구 등의 비용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2억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의결한 상황"이라고 전함.
- **"北여성, 몸매 드러나는 옷 입고 머리는 염색"(11/23, 오늘의 북한소식)**
 - 최근 북한여성들이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염색하는 사례가 늘면서 북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가 23일 전함.
 - 북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30호)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드라마나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젊은이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올 1월부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상품과 가요, 영화 등의 영상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



- 소식지는 "북한당국이 용모, 복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염색한 평양의 젊은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함.

● **北, 남북탁구 단일팀 우승소식 보도(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1일~22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친선탁구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킵'의 남자복식에서 유승민(삼성생명)과 북측 김혁봉의 '남북 단일팀'이 우승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남자복식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김혁봉 선수와 남조선의 유승민 선수는 준결승에서 중국, 카타르 선수들을 3대 0으로, 결승 경기에서 러시아, 미국 선수들을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고 전했으며, 또 여자 복식경기에서는 남한의 김경아(대한항공)와 북측 김해성이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함.

● **北 무용가 최승희 100회 생일 기념(11/24,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로 탄생 100년을 맞은 무용가 최승희를 극찬
- 신문은 이날 최승희를 '조선무용예술의 1번수' '조선의 3대 여걸' '세계적인 무용대가' 등으로 지칭하며 "영도자와 인민의 추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는 조선춤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무용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겼다"고 평가
- 노동신문은 특히 김일성 주석이 높이 평가한 덕에 최승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공훈배우, 인민배우,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초대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 등의 '빛나는 삶'을 누렸다고 주장

● **北서도 휴대전화로 신문 본다(11/26,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조선의 3세대 손전화(휴대전화) 봉사인 고려링크가 주요 신문의 하나인 노동신문의 열람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 또한 조선신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도서열람 서비스도 조만간 시작된다고 소개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성의 합작회사인 고려링크는 지난해 1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MMS)를 개시했고 그해 하반기 영상통화 서비스까지 도입해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 黨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한 圖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자료집-14' 출판(11/21, 중통·중방)
- 평양에 다기능봉사기지인 '고려동포회관'(해내외 조선동포들 전용 이용) 건립(11/22, 중통)
- 北, 김일성 생일 100돌 즈음 도서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동지' 쏘 5권중 제4권 '인류해방의 구성' 출판(11/23,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찬성국 계속 늘어(11/21, 연합뉴스)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함.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 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침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대 인권 관련 협약에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으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존중과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도 강력히 촉구
-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음.
-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뉴스는 전함.

● **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강화 명시(11/22,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함.
- 미국 상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 법안을 의결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이 법안에 서명
- 법안은 미국의 인도적 식량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평화식량 프로그램'에 14억6천600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뉴스는 전함.

● **"美의회, 北-미얀마 핵무기 협력 정보 입수"(11/25, 워싱턴포스트(WP))**

- 미얀마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의회가 이미 수년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이 제기
-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저 의원이 이날 발표할 성명을 사전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
- 루저 의원은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가 약속해온 광범위한 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미얀마와 대화 재개에 나서는 미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얀마 정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
- 상원 외교위 참모인 키스 루스는 "루저 의원은 클린턴 장관의 이번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양국 간 논의 의제가 되길 원했다"고 설명
- 이와 관련, 미얀마 정부는 이런 의혹을 계속 부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WP는 덧붙임.

■ 기타 (대외 일반)

- 中 '류원산'(劉云山, 黨 서기처 서기), 11.24 訪中 北 노동신문 대표단(단장 : 최갑성 부주필)과 담화석상에서 "中-北 친선강화 확신" 표명(11/24,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中 "6자회담, 동북아 안정 보장"(11/2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21일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



장하는 유효한 틀"이라고 강조

- 그는 이어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활발한 양자접촉을 벌여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양자접촉과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은 서로 보완하면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덧붙임.

● 백악관 "北 비핵화의지 여전히 탐색 중"(11/23, 연합뉴스)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6자회담의 성공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여전히 미국은 탐색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우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들로 이런 (비핵화) 조치들을 기꺼이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여전히 탐색 중"이라고 설명
- 그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들은 6자회담의 성공과 미국이 북한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

3. 대남정세

● 통일차관 "현안 논의위해 남북 마주 앉아야"(11/23, 연합뉴스)

-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23일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과 북 당국자들이 마주 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생과 공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동안 조성된 남북간 긴장을 낮추고 막힌 대화의 통로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협력기금에 통일계정신설..통일재원 법제화(11/23, 연합뉴스)

-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통일재원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을 남북협력기금에 신설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의 통일부 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마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 제출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안은 남북협력기금에 남북 교류협력 등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계정의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 안정적인 통합 및 사회 안정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통일계정을 만드는 내용이며, 정부는 통일재원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을 규정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정부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적립시기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내년 기금운영계획이 작성, 국회에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2013년 기금운영계획 편성 때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정부안에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 등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있음.
- 류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힘.

● **당국자, 분배투명성 확인위해 첫 방북(11/25, 연합뉴스)**

- 대북 지원물자의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 당국자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25일 "조중훈 인도지원과장이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밝힘.
-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평양에 숙소를 두고 평화대사협의회가 이미 북측에 전달한 밀가루 300t의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해 평북 정주의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방문한 뒤 29일 귀환할 예정
- 통일부는 "남측의 지원물자가 수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분배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정부 당국자의 방북은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서면 美차관 "6자 재개 갈길 멀다..北 반응 기다려"(11/22)

- 웬디 서면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2일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서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면 차관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모두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UEP 중단을 비롯해 취해야할 조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 과거 대표적 대북 대화파였던 서면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없이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매우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될.
- 그는 3차 남북-북미대화 개최 여부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과의 양자대화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했음.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클린턴 장관이 최근 미얀마에 대해 역사적 방문을 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북한에도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그전에 북한이 밟아야할 단계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클린턴 방북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서면 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이뤄진 것이며 한국 국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FTA를 비준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음.



● 백악관 "北 비핵화의지 여전히 탐색 중"(11/23)

-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여전히 미국은 탐색중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6자회담의 성공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들로 이런 (비핵화) 조치들을 기꺼이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여전히 탐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들은 6자회담의 성공과 미국이 북한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및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 및 EAS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 온 조치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얘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그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운용중인 확산방지구상(PSI)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물질과 WMD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美의회, 北-미얀마 핵무기 협력 정보 입수"(11/26)

- 미얀마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의회가 이미 수년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저 의원이 이날 발표할 성명을 사전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 성명에 따르면 약 5년 전 상원 외교위는 북한과 미얀마의 핵무기 개발 협력 정보를 입수해 상세한 내용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 루저 의원은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가 약속해온 광범위한 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미얀마와 대화 재개에 나서는 미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얀마 정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같은 주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과 미얀마를 차례로 방문하기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이 문제가 방문 기간 논의될지 주목됨.
- 상원 외교위 참모인 키스 루스는 "루저 의원은 클린턴 장관의 이번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양국 간 논의 의제가 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루저 의원은 지난 4월 북한과 미얀마의 핵·군사 협력 실태



에 대해 행정부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

- 그동안 미얀마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협력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의회에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됐다는 주장은 처음임.
- 이와 관련, 미얀마 정부는 이런 의혹을 계속 부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강화 명시(11/22)

-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 미국 상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 법안을 의결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이 법안에 서명했음. 법안은 미국의 인도적 식량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평화식량 프로그램'에 14억6천600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음.
-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할 때 적절한 분배감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고, 과거 식량지원에서 남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했음.

● 美적십자사, 北에 이산가족 서한 전달(11/23)

- 미국 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사에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전달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 미국 적십자사 국제가족추적 프로그램 담당자 캐슬린 샬러닉씨는 방송에 "최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서 서한을 받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 한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강의차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별대사는 "(이산가족 서한 교환 합의를 한) 올 8월 이후 7통의 서한을 북한에 전달했고 1통에 대한 회답이 왔다"고 말해 미국 적십자사의 활동을 확인했음.
- 미국 적십자사는 또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적십자 총회에서 북한 적십자 측과 만나 북한 가족을 찾는 한인이산가족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 중·북 관계

● 中, 北라선 전력공급 송전시설 건설 착수(11/24)

- 중국이 북한과 합의한 라선 경제특구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 시설 건설



- 에 본격 착수했다고 중국의 북극성전력신문망이 24일 보도했음.
- 이 매체는 연변(延邊)배전공사가 최근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 설치 노선을 확정했으며 이는 대북 전력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음.
 - 이 매체는 전력난이 북한의 개발과 개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중간 합의에 따라 연변배전공사가 이달 중순 북한에서 전력망 건설을 위한 측량에 나섰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달 말 다시 북한을 방문, 북한의 전력 공급 계획과 북한 내 중국 입주 기업들의 전력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한 후 내달 전력망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고 전했음.
 -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부족 전력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음. 당시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양국 전력분야 협력 합의문에는 중국이 연변 훈춘(琿春)에서 라진까지 고압 배전시설을 설치, 전력을 공급하고 라선 화력발전소도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라선특구 착공식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중 양국이 협력해 북한의 전력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음. 북·중은 당시 중국의 대북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포함해 두만강 대교로 훈춘과 연결되는 북한 원정리~라진항 도로보수,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설, 시멘트공장 건설, 자동차 관광 등 라선 투자에 관한 5개 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가운데 원정리~라진항 도로보수는 대부분 공사가 완료돼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음.

라. 러·북 관계

● "러시아 극동지역 北근로자 5천명 이상 증가"(11/22)

- 러시아의 극동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작년 이후 5천명 이상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무르주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향후 파견 계획을 포함해 5천 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음.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작년부터 북한 근로자 약 3천명이 내년 9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건설과 주변 도로 정비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
- 또 북한 무역성과 아무르주는 지난 10월 무역과 경제 협력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아무르주의 수력발전소와 철도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북한이 근로자 500명씩을 보내기로 했음.
- 북한은 아무르주의 유희지를 임차해 농업도 하고 있고,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북한 근로자가 벌목과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음.
- 북한은 이들 근로자를 활용해 월 400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됨.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월 1천~1천500 달러를 받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이를 일괄적으로 받아 150~300달러 정도만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신문은 한국의 시민단체인 '북한인권개선회'의 김희봉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6만~7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보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北가스관 실무대표단, 러시아 향발(11/26)

- 북한 정철윤 원유공업상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실무그룹 대표단이 26일 러시아를 가려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대표단의 러시아 체류 일정 및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 간 가스관 건설사업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북한 김희영 원유공업상은 지난 9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공동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음.
- 지난 21일에는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부사장을 만나 가스관 건설 문제를 협의했음.

마. 기 타

●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찬성국 계속 늘어(11/22)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음.
-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음.
- 지난해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더 많아졌음. 지난 2009년 표결에서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국은 늘어나는 반면 반대국은 줄어들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짐.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음.
-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7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인권침



- 해, 아동과 노인의 영양실조와 보건문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지난해 결의안에는 전문 10항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돼있었으나 이번에는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간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음.
 - 또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음.
 - 8대 인권 관련 협약에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으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존중과 남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음. 유엔은 현재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만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유엔 당국자는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과 국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음.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음. 이날 주유엔 대표부는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음.
 -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음.

● "고려항공 여전히 불안전" EU 또 운항제한(11/22)

- 유럽연합(EU)이 21일 발표한 역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서 북한 고려항공을 또다시 취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로 분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음.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음.
- EU 집행위원회 교통 부문의 데일 키드 공보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고려항공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는 계속 EU 회원국에 취항이 금지된다"며 "현재 고려항공에 운항제한을 완화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음.
- EU는 2006년부터 고려항공을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안전 및 관리·감독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2대에 한해 취항을 허용했음. 고려항공은 보유 항공기 20여대 가운데 10여대를 운항 중인데 최근 구입한 2대 외에는 모두 1960~70년대에 제작된 옛 소련제 항



공기임.

- 키드 공보관은 고려항공 관계자들이 운항제한을 완화하려고 EU 집행위 원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지난달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 국제적십자 수년 만에 대북식량지원…수재민용(11/24)

- 국제적십자사(IFRC)가 수일 내에 수해용 긴급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 RFA에 따르면 적십자는 며칠 안에 황해남도 청단, 연안, 봉천군의 6천 가구 2만4천명의 수재민에게 쌀, 옥수수 등 긴급 식량 290t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해남도는 올해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 지원 식량은 무주택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적십자는 수재민이 하루에 쌀 또는 옥수수 400g씩 두 달간 먹을 분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식량지원 결정과 관련, 적십자는 북한 당국이 올해 유난히 많은 기부국에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RFA는 주로 나무심기, 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난 복구 사업을 펼쳐 온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 다루스만 "신숙자씨 사건, 유엔 통해 해결 노력"(11/25)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5일 "신숙자씨 납북사건은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유엔 인권 관련 메커니즘을 모두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하고 "유엔 내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류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위한 워킹그룹(작업반)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현재로서는 신씨의 생사확인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며 "가능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신숙자씨 사건은 상징적 사건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납북자 문제들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이 납북자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돼 포괄적 납북자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한국 정부로부터 전반적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부처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이어 "한국의 주변 국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인간적 대우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내용대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 특별보고관 임명 이후 제네바와 뉴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방북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수락되지 않았으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檢 '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내달 기소(11/21)

- 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사건당시 18세)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다음 달 그를 조기 기소하기로 했음.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1일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송환하면 기소하기 위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왔다"며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음.
-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인도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청구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 바 있다"며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지만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그는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장기화해 애초 공소시효인 내년 4월2일을 넘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효 도래 전에 기소하고자 오늘 사건을 재기한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하지만, 패터슨 측은 흥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검찰은 최근 개발된 혈흔 형태 분석기법 등을 통한 범행 재연과 진술 분석, 도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 중인 미국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임.
-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이달 초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이 끝나려면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한미FTA 비준> 韓경제 '도약 시험대' 올랐다(11/22)

- 4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음.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에 이어 초강국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졌기 때문임.



- 우리 경제는 유럽,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광활한 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을 펼치게 됐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그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1세기 무역강국'으로 뛰어오를 기회를 잡게 됨.
-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제 거인'의 틈바구니에서 미국과 정치, 군사를 넘어 경제동맹,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효과도 예상됨. 물론, 진검승부에서 밀린다면 상황은 달라짐. 붓물 터지 듯 밀려들 선진국 제품과 서비스로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과 경기침체를 되레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임.
-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의 제조업과 IT 분야의 경쟁력, 중국과 일본을 틈바구니에 둔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미 FTA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올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국민으로서 유럽, 미국과의 시장개방은 질 좋은 공산품, 농수산물의 접근성 확대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높아짐. 물가안정과 저축액 증대, 한국산 제품의 품질 제고 노력을 자극해 외환위기 이후 장기침체의 멍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줄 개연성도 커짐.
- 다만, 한미 FTA 협정 타결, 재협상, 비준안 통과라는 긴 여정을 지나면서 드러난 국론분열, 리더십 부재 등은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음.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정치 선진화, 산업 구조개혁, 제도 선진화 등에 뼈를 깎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음. 한미 FTA가 가져올 업종별·계층별 양극화, 선진경제와의 동조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경제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임.
- 지난 7월 1일 자로 우리와의 FTA가 발효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함. 미국의 GDP는 14조3천억 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임.
-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불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GDP 1조4천억 달러)보다 30배, 세계 무역의 60%에 이르는 세계 1,2위권의 경제권에 대한 관세 없는 접근권을 확보하게 됨.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900억 달러 정도임. 수출은 498억 달러, 수입은 4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4억 달러임.
- 통상교섭본부는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에 무역액이 30~50% 정도나 증가했다"며 "전 세계의 경기침체 여파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내년 한미 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음.
-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음. 고용은 35만 명 증가를 예상했음.
- 특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임. 관세 등



-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 이들 공산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는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음.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 후생과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정부의 보호에 안주했던 저생산성, 비효율 부문은 미국, 유럽의 최고급 상품들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아픔을 거쳐야 한다. 의약, 법률서비스 등이 대표적임.
 - 어차피 개방이 대세라고 한다면 이를 피하거나 숨으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함. 미국이 세계의 경영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점도 우리 기업에 여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한미 FTA의 발효는 국내 산업 등 경제구조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상호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인적 왕래의 증가는 고질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투명하지 못한 절차 등의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연스럽게 제도의 혁신과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물론 FTA가 갖는 '양날의 칼' 때문에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다면 판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음.
 -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지정학적 안보위험도 FTA를 통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도 있음. 이는 국가적 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투자유치나 국외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들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한미 FTA가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함. 멕시코가 대표적임.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무관세를 실현했지만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만 붕괴 등으로 이어졌음.
 -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같이 미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아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여지는 있음. 허나 멕시코 정부, 기업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가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한미 FTA 시행에 맞춰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기업 및 생산자에 대한 핀셋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진흥기구들의 역할 및 시스템을 개편하고 국외 영업인력을 다원화하는 방안



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큼.

- 한미 FTA 논의 시작 시점부터 비준안 통과까지 이어져 온 심각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가 역량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 **정부 "내년 1월1일 한미 FTA 발효 위해 노력"(11/22)**

- 정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토록 돼있음.
-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 SOFA 합동위 '기소전 신병인도' 협의(11/23)**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양국은 2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책을 논의했다.
-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의 형태로 새로운 개선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특히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일 양국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준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오늘 회의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의 SOFA 규정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협의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형사재판권 관련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에 따르면 살인·강간·방화·미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합의의사록은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서면사령관 "北도발시 한국군 대응 적극 지원"(11/23)

- 제임드 D. 서면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상기훈련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도발하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면 사령관은 이날 오전 정승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참의 작전상황 평가회의에 참석해 북한군의 동향 분석과 우리 군의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 정 의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되는 날 서면 사령관과 함께 작전 상황을 평가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결연한 의지와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장과 서면 사령관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의 분야·기능별 계획을 지시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지시' 문서에 서명했다.
- 합참 관계자는 "북 도발에 대한 즉응태세를 점검하는 날 한·미가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문서에 서명한 것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0월 말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연내 완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클린턴, 30일~12월2일 한국·미얀마 방문(11/24)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과 미얀마(버마) 방문에 나선다고 미 국무부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30일 부산을 방문해 제4회 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뒤 당일 미얀마로 떠날 예정이다.
-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클린턴 장관의 부산 회의 참석은 국제 안보와 번영, 민주화 진전의 핵심 기동인 발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또 한미 파트너십의 폭과 깊이를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미얀마의 네 피도와 양곤을 30일부터 사흘간 방문한다.



- 국무부는 "이번 방문은 미 국무장관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버마를 찾는 역사적 방문이 될 것"이라면서 "클린턴 장관은 원칙 있는 개입 정책 및 투트랙 접근법의 일환인 직접 대화와 관련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 방문 기간에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여사 및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임.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이 미얀마 정부의 '개혁의 빛'을 목격했다면서 클린턴 국무장관을 미얀마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류우의 "中, 탈북자 한국 입국 협조해달라"(11/22)

- 베이징을 방문 중인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22일 양제츠(楊潔攄<兼대신虎 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음.
- 류 장관은 이날 중국 외교부에서 열린 양 부장과의 면담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발전된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류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중국과 관련해 주 관심사가 탈북자 문제"라면서 "탈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데 대해 감사한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음.
-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송을 막고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양 부장은 "북측의 비법(非法) 입국자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음.
- 류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돼서 동북아의 번영을 추구하는 보다 큰 목표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런 큰 틀에서 남북 간 화해와 공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 측이 우방으로서, 또 친구로서 많은 협력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음.
-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유연화 조치를 통해 대화채널 구축을 시도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중국 측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보임. 류 장관은 "중국인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관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안정,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목표였다"면서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부장은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반도에서의 핵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는 주장을 실천해왔다"면서 "한반도 비



- 핵화 실현 과정에서 중국도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했음.
 -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규형 주중 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쑹보(熊波) 아주국 부국장, 쉬부(徐步) 한반도사무실 부주임, 천샤오춘(陳少春) 한국과장 등이 참석했음. 중국 측 인사들은 면담이 끝난 후 비준 상황 등을 물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표시했음.

● <한미FTA 비준> 韓中FTA 드라이브 걸릴 듯(11/22)

- 한국 국회가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함에 따라 중국도 앞으로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전망됨.
- 그간의 중국은 입장은 명확했음. 한중 FTA의 민감성을 인정하지만 일단 협상을 시작한 뒤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임. 최근 잇따른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서도 중국은 FTA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여러 차례 우리 측을 압박해왔음.
- 올해 4월 김황식 총리의 방중 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요청했음.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부총리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한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며 조속한 FTA 논의를 촉구했음.
- 리 부총리는 2013년 원 총리의 뒤를 이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을 것으로 관측되는 인물임. 중국의 한중 FTA 밀어붙이기는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이어졌음.
- 중국은 EAS를 계기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FTA 의제를 올려놓아 "산·관·학 공동 연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면 한·중·일 3국이 FTA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본격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음.
- 중국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한국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미, 대유럽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임. 또한 중국은 농수축산물 분야 수출 확대에도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경제적 이익만은 아님. 중국은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런 기조 속에서 '통 큰 양보'를 하면서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FTA를, 대만과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음. 아세안과 FTA에 성공한 중국은 이제 한·중·일 3국 FTA를 통해 자국이 중심에 서는 동아시아 자유 경제 지역을 구상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일본보다는 FTA 실현 가능성이 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임.

-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판에 일본이 가세함에 따라 중국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임. 중국으로서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2위에 오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통합의 구심점이 되려던 계획이 TPP의 출현으로 중대 도전에 직면한 셈이 됐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TPP 구상에 맞서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 추진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음. 특히 한미 FTA 비준으로 한중 FTA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일단 사라진 셈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임.
- 한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논평은 이날 오후까지 나오지 않았음. 다만 관영 신화통신이 최루탄이 터지는 등 강력한 야당의 반발 속에서 여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사실 위주로 이 소식을 보도했음.

● 류우익, 다이빙궈에 "北변화위해 리더십 발휘"(11/22)

- 베이징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2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음.
- 류 장관은 베이징 시내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다이 국무위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중국 측의 리더십 발휘를 당부했음.
- 류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설득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음.
- 류 장관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남쪽과 북쪽의 친구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는 심정을 다 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더는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시시킬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다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역사 흐름의 대세이고 남북동포 모두의 마음의 소리"라면서 "21세기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이고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다이 국무위원은 이어 "회담 각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류 장관은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도 별도의 면담을 갖고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초를 지키는 바탕 위에서 유연성을 강화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왕 부장은 "류 장관이 남북 간 안정적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 정부와 류 장관의 마음을 알게 됐다"면서 "기회가 되면 한국정부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류 장관은 특히 북한이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한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정책과 팀 등을 짜려면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2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다. 이 점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측은 한중수교 20주년인 내년에 양국 당국 간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의를 된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중 FTA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해군 왕건함 中 상하이서 수색구조 훈련(11/23)

- 한국 해군 3함대의 왕건함이 23일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해군 부두로 입항, 한·중 연합 해상탐색 및 구조활동에 들어갔다.
- 앞서 전날에는 문병욱 3함대 사령관과 쑤즈첸(蘇支前) 중국 동해함대 사령관이 교류협력회의를 열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상대국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 문 사령관은 "내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양국이 군사, 문화 교류를 확대해 전략적 동반자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 해군도 한국에 입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쑤 사령관이 중국 상부에 한국 방문을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국 해군이 상하이에 입항한 것은 2001년과 2007년, 2009년에 이어 4번째임. 2001년과 2007년에는 해군 시관생도 순항 훈련 목적으로 입항했으며 2009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해 방문했다.
- 이번 왕건함의 상하이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먼저 작년 천안함 침몰 사건 후 한국의 서해 군사훈련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한 것으로 평가됐다.
- 이날 왕건함 입항을 위해 중국 해군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세심하게 준비, 3함대 관계자들이 크게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오는 24일 상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왕건함 공개 행사를 하고 중국 해군과는 친선 축구 대회도 열기로 했다. 왕건함은 25일 오전 상하이를 떠날 예정이다.
- 또 왕건함은 움직이는 영토인 국적선으로서 대한민국 독립의 성지인 상하이를 방문, 국위를 선양하고 교민들의 사기를 북돋웠음. 이날 왕건함 입항식에는 안충기 상하이총영사와 박현순 한국상회장 등 교민 50여명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 한·중 우호주간 中 정저우서 개최(11/24)

- 주중 한국대사관은 25일부터 사흘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한국·중국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함.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2~4차례 우호주간 행사를 열어왔음.



- 행사에는 이규형 주중 대사를 비롯해 경제·문화·학술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함. 이 대사는 행사 첫 날인 25일 루잔공(廬展工) 허난성 당 서기, 귀경마오(郭庚茂) 성장과 면담에 이은 만찬을 할 예정임. 이 대사는 또 같은 날 정저우 대학교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와 청년 학생들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함.
- 경제행사로는 한국과 허난성의 기업 150여 곳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가 정저우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며 여기에는 환경, 의료기기와 더불어 경상북도 특산품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임.
- 허난성의 주요 지도자들과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원탁회의도 준비돼 있음. 중국인의 한국 투자와 관광 유치를 위해 코트라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한국투자관광유치설명회도 열림. 또 한국종합예술학교 공연단원의 전통음악 공연이 26일 허난 예술센터에서, 사진전이 26~2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됨.
- 이밖에 정저우 소재 대학들의 한국어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경연 대회가 정저우대학교에서 25일 열리고 한·중 우호협력포럼도 예정돼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미FTA 비준> 日 TPP 추진 힘받을 듯(11/22)

- 한국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관심 있게 지켜본 국가가 일본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역개방 추진 일정이 한국의 FTA 비준 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일본은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는 동안에도 과감한 개방을 할 수 없었음. 한국보다 내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농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실질적인 이유가 됐음.
- 이런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다자간 FTA인 TPP와 관련해 "교섭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음.
- FTA 체결에서 앞서간 한국 기업들이 유럽 등과의 무역에서 일본의 영역을 잠식하거나 심지어 앞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임.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 덕분에 TPP 교섭 협의라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음.
- 하지만 교섭 협의를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농업, 토목·건축업, 제약업계 등 내부 반발이 여전히 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음. 노다 총리가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협상 참여의 전단계로 관련국과 먼저 '협의'해보겠다고 선언하는데 그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임.



- 그런데도 일본 야당과 농업 단체 등이 벌떼같이 일어나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음. 이런 와중에 한국이 한미 FTA를 강행 비준했고,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된 만큼 이번에는 일본 재계의 위기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임. 경제계가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계기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 일본 내 TPP 추진과가 이를 내년 'TPP 교섭 참여' 선언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미국이나 한국을 핑계 삼은 일본의 독특한 내부 논의 구조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외압에 의한 국내 구조 개혁의 추진"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이신문 인터넷판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날 한국 국회의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등을 속보로 다루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24일 도쿄서 현안 논의(11/23)

- 제10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24일 도쿄에서 열림. 두 나라는 회의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 에너지·환경협력 등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과제(WTO/DDA) 등 경제통상관계 전반을 협의할 예정임.
- 정부는 외교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제 단체, 업계 관계자 등 40명으로 민관 통상사절단(단장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구성해 25일 샌디에에 파견할 예정임.
- 사절단은 지난 3월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일본 정부, 경제 단체, 기업인들과 함께 '일본 동북지방 부흥·관광 지원 한·일 파트너십 간담회', '한일 동북지방 교류의 밤' 행사를 함.
- 통상교섭본부는 "관광 협력, 산업간 교류 등 협력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리 기업 부흥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안부 청구권 증액' 국회서 두 배 이상 증액(11/23)

-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비용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됐음.
-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위안부 청구권 관련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한일청구권 위헌 판결 후속조치 예산'을 5억8천800만원으로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며 현재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억3천600만원 보다 무려 3억5천200만원이나 증액된 것임.
- 외통위의 이 같은 증액 편성은 현재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협약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임.
- 외통위가 제출한 예산 항목에는 ▲다국적 변호인단 구성비용(2억 원) ▲중재판정단 구성비용(9천만 원) ▲자문위원 운영비(1억 원)가 들어있음.
-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일본 측에 위안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가 두달 넘도록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음에 따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李대통령, 내달 17~18일 일본 방문" <日언론> (11/25)

-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7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다음달 17~18일 일본을 실무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할 경우 국제회의 참석차 방일한 것을 제외하면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권 당시인 2009년 6월 이후 처음임.
-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 정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민 방문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일 관계의 냉각을 피하기 위해 서둘 외교 복원을 위한 방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라. 미·중 관계

● 미중, 환율·지재권·시장접근 의제로 격돌(11/21)

- 중국과 미국이 20~21일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22차 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지적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를 의제로 팽팽하게 맞섰음.
- 미국은 이번에는말로 해당 의제에 대해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겠다고 압박했으며 중국은 경제 이슈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회의는 중국 측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미국 측의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 주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 중국 측에서는 가오후청(高虎城) 국제무역대표, 한창푸(韓長賦) 농업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에너지국장 등이 배석했음.
- AFP에 따르면 브라이슨 미 상무장관은 회의에서 "미국 내에서 미중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쟁점 분야에서 확실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음.
- 미국은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에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와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 철폐, 열악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강력하게 거론해왔음. 특히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 18



- 일 베이징(北京)에서의 한 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의 기업 환경은 외국 기업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갈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음.
- 중국 역시 하와이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미국에 급격한 위안화 환율 절상 불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왕치산 부총리는 특히 미국에 위안화 환율 절상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왔다면 그런 경제 이슈들을 더는 정치문제화하지 말라고 요구했음.
 - 왕 부총리는 아울러 위안화 환율 평가 절상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을 해제하고 미국 시장을 중국 기업에도 공평하게 개방하라고 촉구했음.

● <美, 中에 "아프리카서 책임있게 행동하라">(11/23)

- 중국과 미국 간에 아프리카 책임론 공방이 재연될 조짐임. 이번에는 조니 카슨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차관보가 불을 지폈음.
-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카슨 차관보는 현지시간으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전화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석유와 가스, 광물을 마구 사들이는 중국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포문을 열었음.
- 그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고용할 때는 현지 노동법을 지키고 적절한 임금을 주는 한편 아프리카 인력을 제대로 교육하고 기술도 전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적수로 여기지 않지만, 중국이 아프리카에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대거 불러들이는 바람에 현지 고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음. 아울러 "아프리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수천 명의 미국 근로자를 함께 데려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음.
- 카슨 차관보는 또 중국의 부패를 거론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뇌물에 연루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중국이 미국, 유럽과 같은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언급에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아프리카 순방에서 (원조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해 "아프리카 나라들은 신(新) 식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에 발끈해 여러 채널을 통해 반박한 바 있음.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 직후 "중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침략을 겪은 나라들로 평등과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중국은 아프리카를 충분히 존중한다"고 맞받았음.



- 이어 중국 사회과학원의 허원핑(何文平)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도 신화통신을 통해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국을 이간질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야오젠(姚瑩)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얘기"라며 날을 세웠었다.

● 中 외교부장, 美에 "서로 핵심이익 존중하자"(11/24)

-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23일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양국 모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찾은 셔먼 차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같이 언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 그는 그러면서 "양국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양 부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이 호주에 미군기지 설치 계획을 밝히고 인도네시아에 F-16 C/D 전투기 판매 결정을 내리는 한편 미얀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보내 외교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등 남중국해를 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 중국은 지난해부터 티베트, 대만과 더불어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며 미국에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오고 있음.
- 양 부장은 이어 "중국과 미국의 안정적인 관계발전은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익에도 부합할 뿐더러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며 "미국이 양국 지도자들 간에 체결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화통신은 셔먼 차관이 미중 양자관계 발전과 협력이 양국의 국민의 이익에도 들어맞는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양 부장과 셔먼 차관 회동에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주일미군 군속 공무중 범죄 日에 재판권(11/24)

- 주일미군 민간인 직원(군속)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운용을 개선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양국 SOFA 합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군속의 공무중 범죄라도 미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본이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 지금까지는 미군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를 갖고 있기만 하면 일본 측은 범죄를 일으킨 미군 군속을 기소할 수 없었음. 하지만 미국 법원이 1960년 '군속을 평상시 군법회의에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 로는 미군 군속은 어디서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주일미군 부대에는 미국 측의 일반 범정이 없기 때문임.
- 이같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올 1월 오키나와(沖縄)시에서 미 군속(24)이 귀가 도중 교통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음. 나하(那覇)지검이 이 군속을 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일단 불기소 처분했지만, 나하 검찰심사회가 5월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25일이 재수사 기한임. 나하지검은 미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이 남성을 기소하기로 했음.
 - 한편 미일 양국의 SOFA 운용을 바꾸기로 한 것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안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대미 감정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됨.

바. 미·러 관계

● <美-러 관계 또다시 얼어붙나>(11/24)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화해와 협력'을 구가하던 러-미 관계가 또다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번에도 사단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유럽에 구축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시스템임. 러시아와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조지 W 부시 집권 시절인 2000년대 중반 역시 유럽 MD 문제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미국과 나토는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루마니아와 터키 등에 MD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 측에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양측의 MD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 ◇ 러 대통령의 경고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3일(모스크바 현지시간) TV 방송을 통한 대(對)국민 특별연설에서 나토의 유럽 MD 구축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러시아 서부 지역에 나토 MD를 겨냥한 전술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최악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위협도 했음.
- 메드베데프는 미국과의 MD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장 나토 동맹국들과 인접한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시스템을 전투태세로 돌입시키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전략미사일군과 해군에 배치되는 전략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나토의 MD 망을 뚫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는 이어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러시아 서부와 남부 지역에 나토의 유럽 MD를 격퇴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며 "칼리닌그라드주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지난해 미국과 체결해 올 2월 발효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에 없이 톤이 강한 발언이었음. 이에 대해 현지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메드베데프가(미국과의) 리셋(reset, 화해) 정책을 포기했다"고 논평했음.
- 드미트리 로고진 나토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통령 연설과 관련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협상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며 "만일 누군가가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에 도전한다면 당연히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고진 대사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이달 초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틀 내에서 이루어진 러-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유럽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꿈적않는 미국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미국은 유럽 MD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3일(미국 동부시간)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음.
-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유럽 MD 시스템은 유럽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며 MD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도 "나토 동맹국 국경 인근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위협은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MD 프로젝트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러시아는 나토와 유럽 전역을 구역별로 나눠 함께 방어하는 공동 MD망 창설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나토의 유럽 MD 망이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측의 MD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사. 미·러 관계

● 中日, 해상 충돌 방지 정례 협의(11/23)

-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동중국해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년 봄부터 정례 협의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2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다음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상 위



- 기 방지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예정임.
- 이 정례 협의에는 일본 측에서 외무성과 방위성, 해상보안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의 국장급이 참여함. 일본과 중국은 작년 9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서의 선박 충돌 사태 이후 해상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음.
 - 일본과 중국은 지난 2001년 동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경우 목적과 해역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에 합의했으나 중국 선박의 일본 해역 침범이 잦아지면서 흐지부지됐음.
 - 중국이 해상 위기 방지를 위한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해상 활동을 견제하자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임.

● 원자바오, 日에 東亞 공동발전 협력 강조(11/24)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3일 일본에 동아시아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원 총리는 "영향력이 큰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의 (공동발전을 위한)노력이 두 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공통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해당 지역 국가들의 연대, 발전, 협력이 대세를 이뤘다고 소개했음.
-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일 양국이 고위층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전략적인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 원 총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로서 복귀를 선언하고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가속하고 여기에 일본이 가세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TPP 협상 핵심당사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보임.
- 중국은 여건만 맞는다면 TPP 협상에도 참여하겠다는 태도이지만 그보다는 작년에 중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한·중·일 FTA를 서둘러 아시아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을 합친 이른바 아세안+6 자유무역권과 미국 주도의 TPP 구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으나 후자에 마음이 더 쏠린 기색이 역력함.
- 겐바 외상은 이에 중국의 발전이 일본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



며 양국 관계발전이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도 들어맞을뿐더러 지역과 세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음.

● 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11/24)

-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내린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24일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37개 지역의 농장과 식품 생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면 수입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임.
- 질검총국은 가축사료 수입도 허용할 계획이지만 채소, 과일, 유제품, 수산물 등 변질성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 이번에 수입 재개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지바,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현, 도쿄 등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